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2025. 12. 17.

I.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 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 한미 관세합의(11.14)로 대미 통상 불확실성 해소

-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美 관세조치 인하·철폐
 - * 상호관세 25 → 15%, 자동차·부품 관세 25 → 15%, 항공기·부품 관세 철폐 등
- 미측 요구 대비 투자규모 축소 (3,500 → 2,000억불) 및 안전장치* 마련
 - * 연간 한도 200억불 설정, '상업적 합리성' 고려 명문화 등
- 한·미 조선협력(MASGA) 등 새로운 시장 선점 기회 확보
 - * 예: 미국 상선·군함 건조 협력, 미국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 등
- 긴급 자금지원, 관세 바우처, 무역보험 확대 등 관세 피해업종 지원
 - * 자동차 긴급대응 대책('25.4),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 대책('25.9)

□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수출과 국내 투자는 견고하게 성장

- '25.11월까지 지난해 대비 3% 증가, 사상 최초 7천억불 눈앞
 - * 역대 1~11월 수출 순위(연도): 1위 6,402('25) → 2위 6,287('22) → 3위 6,223('24)
-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은 사상 최대치 경신 전망*
 - * 반도체: ('24.11) 1,274억불 → ('25.11) 1,526억불 ('24 수출액 1,419억불 既 경신)
자동차: ('24.11) 648억불 → ('25.11) 660억불 ('24. 수출액 708억불)
-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도 지속 증가 추세, 이행률도 양호
 - * ('23) 96조원 → ('24) 114조원 → ('25 계획) 122조원 (3분기 이행률 68%)
- APEC 성공적 개최*, 90억불 투자 유치** 및 최대 수출계약 성과
 - * APEC CEO Summit 1,800여명, K-Tech 쇼케이스 등 부대행사 13,000여명 참가
 - ** (AWS) AI고속도로 등 50억불 투자, (지멘스헬시니어스) 400명 이상 신규채용 등

□ 지역 위기업종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지역경제 회복 기반 마련

-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인 석유화학, 철강산업 사업재편 본격 추진
 - 정부가 구조개편 원칙, 지원방향 先 제시 → 자율개편 강력 유도
 - * 석화 구조개편 로드맵 및 기업 자율협약('25.8),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25.11)
 - 공정거래 특례, 사업재편 지원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수소환원 제철 예타 통과('26~'30, 총 8,146억원) 등 친환경·고부가 전환 지원
 - * 철강 특별법 국회 통과('25.11), 석유화학 특별법 국회 통과('25.12)
- 위기업종 소재 지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회복 지원
 - * (석화) 여수('25.5), 서산('25.8), (철강) 포항('25.8), 광양('25.11)
- 지역 성장의 토대인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제시('25.9)

□ 제조AI, R&D 생태계 복원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 산·학·연 AI 역량 결집 위해 제조AX 얼라이언스(M.AX) 출범('25.9)
 - 앵커기업 중심 첨단 'AI팩토리' 100개 돌파('24. 25개 → '25. 102개)
 - * (S화학) 점검시간 98%↓, (G정유) 연료비 20%↓, (H조선) 작업시간 13%↓ 등
 -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등 임바디드(embodied) AI 본격 추진
 - *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25.11), 휴머노이드 산업현장 실증 개시('25.9) 등
- 역대 최대 규모 '26년 산업 R&D 예산(5.5조원, +18%) 확정

◆ 어려운 여건 속에 거둔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개혁과제 대두

-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경제 활력 저하
- 급격한 기업의 해외투자 등으로 국내투자 위축, 산업공동화 우려
- G2 갈등, 자국이익보호, 산업정책 부활 등 新통상질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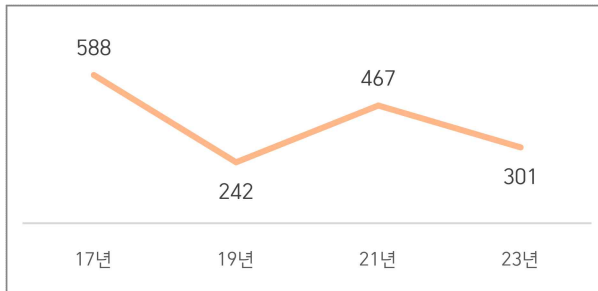
2 대내외 여건

□ 내재적 성장동력이 저하되면서 구조적 저성장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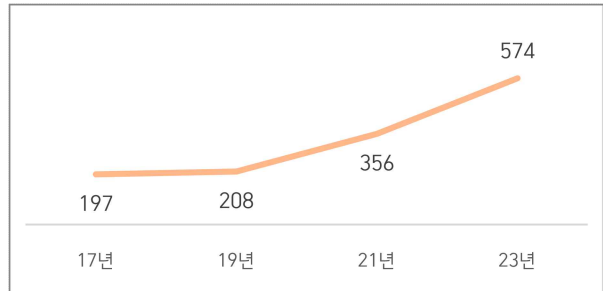
- 생산성* 및 자본기여도 하락, 인구구조 변화 등 기초체력 약화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6~'10) 1.0 → ('11~'15) 0.52 → ('16~'23) 0.2

- 기업 성장이 정체되면서 생태계를 넘어 경제 전반의 역동성 약화



< 중소→중견 성장(개사) >



< 중견→중소 회귀(개사) >

- 수도권 1극 체제는 지역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며 불균형 성장 가속

□ 주요국 산업정책 부활로 국내 주력산업 위기감 고조

- 중국제조 2025, 美·日 반도체 재건 등 제조 생태계 경쟁 가열

- 우리 제조업 우위 점차 상실, 경쟁국이 추격·역전

* 제조업 경쟁력 지수('13→'23, UNIDO): (中) 5위→2위, (韓) 3위→4위

** 한중 기술격차('15→'23, 韓 우위): (반도체) 1.2년 → 0.4년, (이차전지) 1.6년 → 0.4년

- 제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AI 융합 산업화 경쟁 속도전

- 관세 회피를 위한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로 국내 산업생태계 약화, 상대국 정책 변경에 따른 해외 현지 리스크* 확대

* 중국 반도체 공장 VEU 해제,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구금 사태 등
↳ Validated End U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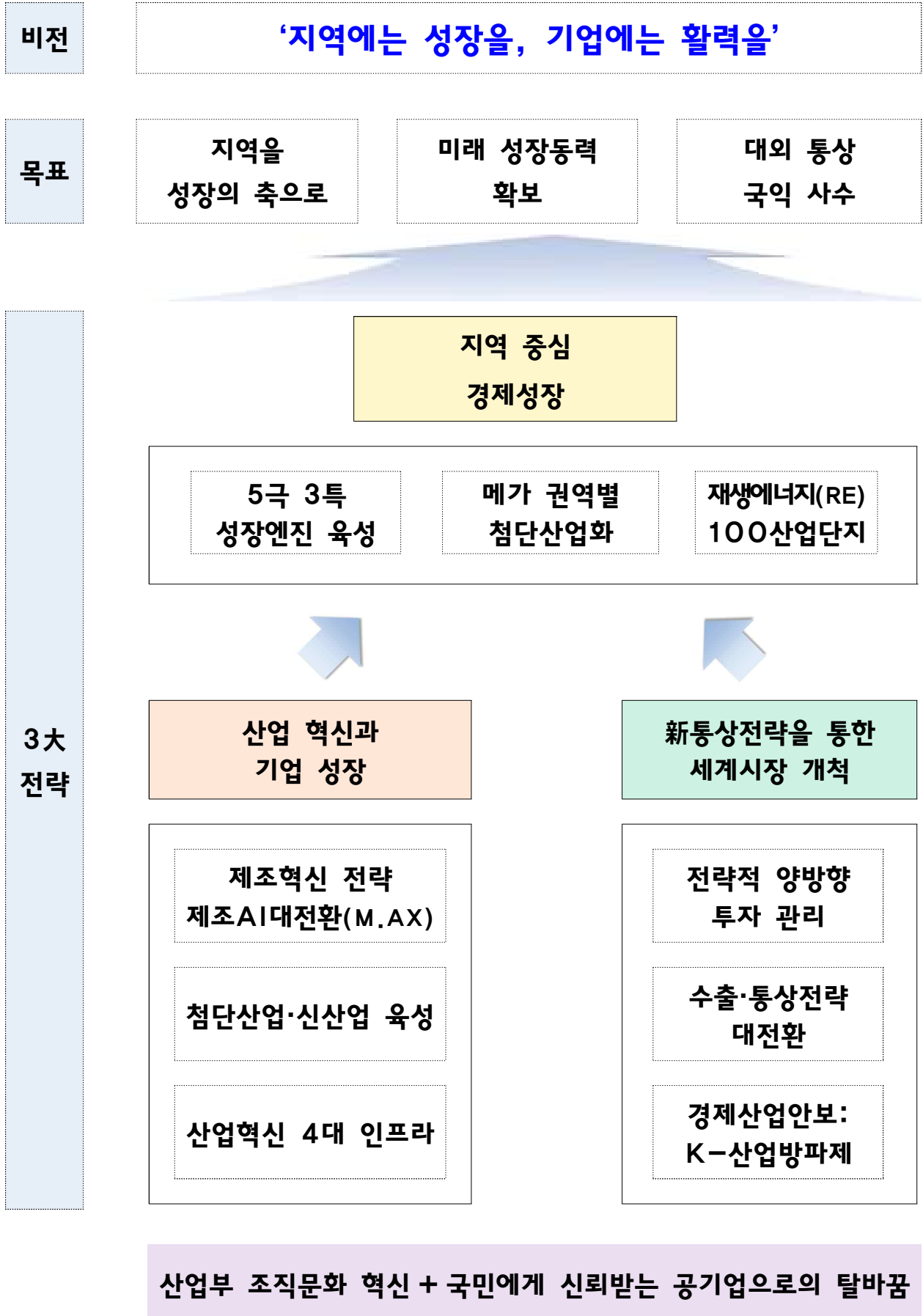
□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무역, 공급망 등 통상 불확실성 지속

- 美 15% 상호관세는 여전히 우리 수출에 부담

- 미·중 기술·자원 수출통제, 공급망 분절은 우리 경제안보 위협

* (美) HBM, 추가 반도체장비 통제조치('24.12), AI칩 통제 강화조치 발표('25.1)
(中) 사마륨, 가돌리늄 등 중희토류 7종 수출통제 시행('25.4)

3 향후 업무추진 방향



Ⅲ. 중점 추진과제

1.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 지역이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지원

①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국정과제 30, 49)

□ 5극 3특 균형성장의 견인차, '성장엔진' 선정

- 권역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되 국가 산업정책과 연계
- 주력산업과 新산업을 포함하되 AI·미래모빌리티는 **쏠 권역**에 적용
- 기업과 소통하고 관계부처·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선정(지방위 의결, '26.2)

□ 선정된 성장엔진 → 범정부 '5종 세트'로 지원

- (세트1: 규제) 권역별 규제프리존 확산 →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지원
* 지역의 규제완화 수요 예시 : (자동차) 미래차 도심주행 규제특례, 개인정보 수집 특례
- (세트2: 인재) 지역 인재양성이 기업 유치로 연결되는 **순환** 구조 형성
* 권역별 거점 국립대(9개) → 성장엔진 특화 융합연구원 육성 → 인재공급
- (세트3: 재정) 대규모 기업유치와 투자 위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
* 미국 IRA 지원금 수준에 준하는 기업투자 지원금 도입 추진
- (세트4: 금융) 성장엔진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글로벌 성장 견인
*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 이상을 성장엔진 육성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
* (금융지원) 동남권 등 지역투자공사 설립, 무역보험 한도확대 및 보험료 할인 등
- (세트5: 혁신) 지역 중심의 기술개발, 창업 활성화, 사업화 촉진
* 2조원 규모 대형 R&D 추진,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창업도시 조성 등

□ 성장엔진 선정 및 지원방안 수립 조속히 마무리

- 지방정부 주도로 기업투자 유치와 정부 지원계획을 담은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초광역 협약**'으로 공표('26.上)

②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화 추진

□ 지역 산업 전반 인공지능(AI) 대전환

- AI팩토리 등 지역 기간제조업의 생산성 제고 위한 제조AX 확산*

* '30년까지 AI팩토리 전국 500개 확산 목표 ('25.11 기준, 102개 보급)

- 지역별 주력 산단을 AI·로봇 기반 M.AX(제조AX) 클러스터*로 전환

* ▲다크팩토리, ▲제조AX 인프라, ▲AI·로봇 생태계 (~'30, 권역별 1개, 총 7개 조성)

□ 5극 3특 권역별 연결을 통해 첨단산업 벨트 조성

-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부산-구미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 패키징 등 유망 분야를 지역 여건*에 맞게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

* (광주) 반도체 첨단패키징 클러스터 구축, (부산) 전력반도체 생산 허브 육성
(구미)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기지 조성

-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 구축

- 기초원료(니켈·리튬) 생산을 위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26.上)

□ 지역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

- 미래차 실증 거점으로 광주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

* (가칭) 피지컬 AI 기반 미래차 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추진

-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생태계 완성*을 위해 첨단 연구원 구축**

* R&D(연구원) - 실증(혁신공정센터 등) - 사업화 지원(연구원) - 양산(앵커기업)

** '30년 개소 목표(국비 1,450억원 + 지방비 550억원)로 사전기획심사제도 추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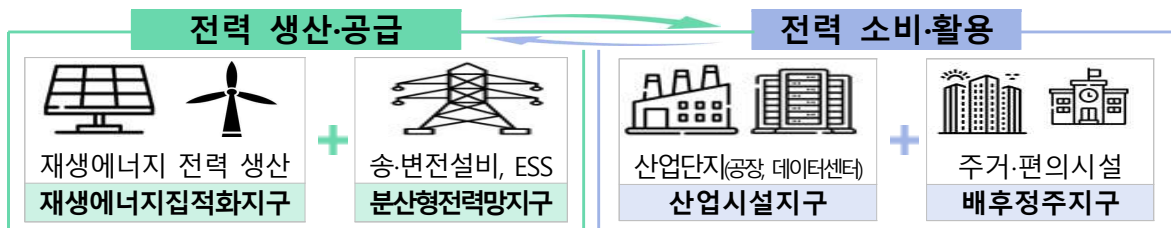
- 대구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협업작업, 물류운반 등 AI 로봇 개발*

* 지역거점 AX 혁신기술 R&D사업: '26~'30년간 1,000억원 이상 투입

③ RE100 산업단지 본격 추진

□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地產地消형 RE100 산단 조성

- 입지: 지방정부가 기본계획 수립 → 정부 위원회(長: 국무총리)가 선정
- 개발: 재생e, 분산형 전력망, 산업시설, 배후 정주시설 연계



- 전력: 대규모 재생e 발전단지 조성, 부지 임대, 설비 저리 용자, 분산 전력망 구축 지원 등 안정적·경제적 재생에너지 공급

□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 지원

- 현존 최고 수준 세제·재정 패키지*, 재생e 구매 등 인센티브 제공

* (세제) 수도권 이전 및 RE100산단 內 창업·신설시 법인세, 취득·재산세 등 감면
(재정) RE100산단 입주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및 국고 보조 비율 상향

- 입주·건축 규제완화, 지방정부 설계형 규제특례* 등 규제해소 병행

* 지방정부+기업이 규제특례 설계 → 정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 완화

- 산업단지 개발 단계부터 주택, 문화, 복지시설을 연계 기획하고,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교육 여건 마련 (범부처 합동)

□ 특별법 제정 후 (잠정 '26.上) 입지를 선정하여 RE100 산단 신속 조성

- ▲기업 수요, ▲부지 및 기반시설, ▲주민 수용성 등 요건을 고려, **시범단지 선정 및 조성계획 발표('26.下)**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2.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 제조 AI 대전환(M.AX): 산업과 AI 융합을 통해 차세대 제조 경쟁력 확충

1 제조혁신 전략 'M.AX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 제조업 생산성 혁신을 속도감 있는 **연결과 협업**으로

< M.AX ALLIANCE >

내 용	의 미	내 용	의 미
Advance	목표는 생산성 ↑·고도화	Acceleration	AI전환은 속도와의 전쟁
Link	데이터·기술·인력을 하나로 연결	Network	모든 주체간 협력 생태계 구축
Leverage	풍부한 제조데이터 활용	Convergence	범정부 정책·자원 융합 필요
Innovation	AI로 혁신하여 세상을 변화	Expansion	쏠산업 확장 및 글로벌 진출

□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업종별 최고 수준 AI 모델과 제품 개발

↳ 産·學·研 1천개 이상 단체가 참여, 데이터 활용, AI 공동 사업기획 등 수행

○ **첨단 AI 팩토리** 구축*, 양질 데이터 기반 제조 AI 생산 모델 개발

* (현황, '25) 102개 구축 → (목표, ~'30) 누적 500개 이상

○ AI가 탑재된 제품 융합으로 경쟁력 혁신(예: 완전자율운항선박)

□ 공급망 내 수직적 AX 및 지역 산업으로 M.AX를 공간적으로 확산

○ 공급망 내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 구축('26, 60억원)

*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활용 가능한 AI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하는 프로젝트

○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X 실증산단*** 13개 조성('26, 260억원)

* AI모델 실증 테스트베드, AI 교육, 컨설팅 등 제조 AI 인프라·서비스 구축 지원

□ M.AX 필수 투입요소인 데이터, 예산, 규제 개선 등 패키지 지원

○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위한 기술 확보·플랫폼 구축('26, 116억원)

* 제조데이터 표준화·암호화·비식별화 기술개발, 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조성 등

○ 얼라이언스에서 제안한 **예산사업 우선 반영 및 규제*** 신속 개선

* 예: 휴머노이드 산업현장 투입 허용, 자율주행차 원본 영상 활용 허용 등

② 첨단산업 · 신산업 육성 (국정과제 29, 30)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반도체 국내 첨단 마더팩토리, 해외 양산을 통한 세계 1등 초격차 확보

○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

- 자동차, 가전, 로봇, 방산 분야 **수요연계 AI 반도체(NPU)** 개발
- 차량용 **MCU**, 전력반도체 등 **미들텍 반도체 우선구매** 등 국산화
↳ Micro Control Unit
- **‘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 설립 등 국내 팹리스 규모 10배 확장
- 반도체 설계인력 역량 제고 위한 **‘Arm 스쿨’** 설립(’26~’30, 1,400명)

○ 「반도체 특별법」 기반, 전용 **특별회계 신설**(’27)

배터리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보, 해외 양산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

○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 (R&D) 1,824억원(~’28), (상용화) 성능·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 등

○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 **국내 신규 수요 창출**

-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시 **산업 생태계 기여도** 평가(’26)
- **방산, 로봇** 등 신규 수요 특화 배터리 R&D 추진(400억원)

자동차 국내 400만대+α, 해외 생산거점을 통한 미래차 시장 선도

○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SDV*** 플랫폼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26, 총 743억원(신규 443억원 포함))

* 車 기능을 SW로 구현+무선 업데이트로 성능 개선(Software-Defined Vehicle)

○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및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최대 100만원)

* ’26. 전기차 충전기 7.1만기(급속 4,450기), 수소차 충전소 135기 추가 보급

○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30, 200개)에 자금·R&D 등 패키지 지원

조 선 국내 고부가 선종, 美 MASGA 등 해외투자로 제조경쟁력 수성

- **LNG 화물창(KC-2) 실증**, 암모니아 등 차세대 동력체계 핵심기술 확보
- 지역 기자재 생태계 지원을 위한 **수출공급망 보증 프로그램 신설**
- 원자재 구매, R&D 협력, 기자재 실증 등 **조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철강-조선’ 및 ‘조선-해운’ 상생협의회** 발족('26.1분기)

미 래 新산업 육성

바이오 AI 융합 바이오 제조혁신 및 소부장 국산화

- 후보물질 개발-실증-스케일업 등 **바이오 제조AI 혁신 기반*** 조성
*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신규 구축(~'29), 공공 CDMO 장비 고도화(~'30) 등
- 배양 정제 등 **바이오의약품** 공정 **소부장 핵심 품목 국산화**
* 배지, 필터 등 핵심 품목 80개 R&D(총 1,600억원 이상)

방 산 방위산업의 수출 산업화

- 방위산업 첨단전략특화단지 신규 지정('26.下)
-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위한 G2G 협력안(한-캐 산업협력패키지) 마련
- 차세대 전투기·무인기용 **첨단항공엔진 소재·부품 국산화**
* 항공엔진 모듈(팬, 압축기, 연소기 등) 기술개발('27~'34, 약 9,000억원)

로 봇 AI 휴머노이드 보급

- AI를 접목한 제조, 유통, 농업 등 **산업특화 휴머노이드 개발***
* 휴머노이드 로봇 AX 기술개발 R&D('26~'30년, 약 300억원)
- 휴머노이드의 AI 학습, 설계, 인증 등 지원 **인프라 확충**
* 휴머노이드 개발혁신센터('25~'29, 100억원), 안전인증센터('26, 9억원)

3 산업혁신 4대 인프라 구축

□ 금융: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산업-금융 연계 강화

- 국민성장펀드 본격 출범(12.10) 계기, 1,2~N호 메가프로젝트 설계
 - 산업부 내 금융전담팀 운영, 지역투자 프로젝트 우선 검토
- 지방투자 연계, 공정위 사전심사·승인 전제로 반도체 산업 대규모 자금 부담 경감을 통한 투자 촉진 위해 일반지주회사 특례 도입('26.上)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증손회사 의무지분을 완화(100% → 50%),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 허용

□ 탄소: 산업 성장지향형 그린전환(GX) 추진

- 산업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수립('26~'27)
-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NCC 등 대규모 감축기술 개발('27~'36) 및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 감축투자 지원('26, 신규 250억원)
- EU 등 규제대응 위한 탄소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29, 500억원)
- 「산업 GX 촉진법」 제정(기존 「친환경산업법」 전면 개정)

□ 표준: 국가표준 재정비 및 AI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 60년 만에 KS 인증 전면 개편, 맞춤형 다품종·소량생산 인증지원*
 - * 공장심사 없는 제품심사 신설, OEM 설계·개발자의 KS 신청 허용 등
- 자율제조, 자율주행, 자율운항 선박 등 6대 제조AI 표준 개발

□ 사업재편: 석화, 철강 선례 활용, 산업 재편 프레임워크화

- 구조적 위기 판단시* 업계·지역협의체 공동 구조혁신 계획 마련
 - * 업계와 정부 공동, 기업경영지표 등 분석(사업재편지수 개발 연구용역, '26)
- 지역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지역위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26.下)
 - * 지역기업 매출·고용·업황 등 지역경제 데이터 통합 관리 → 위기징후 선제 포착

3. 신통상 전략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

◇ 글로벌 투자 전략성 강화, 수출·통상환경 변화에 공세적으로 대응

① 전략적 양방향 투자관리 (국정과제 37)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미투자 관리 체계 구축

□ 대미 전략적 투자 이행 거버넌스 구축

-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 선정을 위한 국내 협력체계 가동
 - 조선(국방), 의약품(복지), AI(과기) 등 관계부처와 실시간 핫라인 구축
 - 산업부 내 사업관리단 구성, 사업 발굴 및 전략적·법적 검토
 - * 사업관리단 중심 투자전략 마련 → 사업발굴·검토 → (美 사업선정후) 사업관리 지원
- 국내적으로 결정된 사업만을 미국이 최종 선정하고, 미측의 유·무형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적극 대미 협의
 - 특별법 시행전 사업 설계 → 시행후 국내 결정 및 미와 본격 협의

□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투자금 회수가 확실한 투자프로젝트 발굴

- 조선을 시작으로 업계와 협업下, 소규모라도 충분한 현금흐름 창출 가능한 모델사업 발굴
 - 조선은 위험도가 낮은 대출, 보증 위주의 협력프로젝트 우선 제안

□ 대미 전략적 투자와 국내 투자를 연계하여 수익 환류

- 기회 최대화, 공정성 원칙 하에 우리 기업 참여 확대
- 참여 수익을 활용한 국내 투자, 현지수요 기자재 수출 등 추진
 - * 무역, FDI, 국내투자 연계 등을 균형있게 포괄하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추진

전략적 외국인투자(FDI) 유치·관리 300억불 초과, 사상 최대 목표

□ **첨단산업 중심으로 프로젝트형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

- 산업생태계 갭(gap) 분석을 통해 **핵심 유치품목***을 선정, 외국기업 중 관련 **핵심기술, 공급망 연관 기업** 타겟 설정후 **전략적 IR 전개**
 - * 첨단산업·공급망·AX·GX 등 4대 분야 중심 품목 발굴·선정
- 현금·입지 지원, 규제 해소 등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패키지** 설계

□ **RE100산단, 첨단특화단지 등 지방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

- 외국인투자 중점유치입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비율 상향 검토**

2 수출·통상 전략 대전환

□ **3대 권역별 통상전략 혁신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

미-중 안정적 리스크 관리와 **전략적 자율성 공간 확대**

- 관세협상 타결후 비관세 등 **對美 통상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원산지 검증, 비자 애로 등 **對美 수출·투자 걸림돌 적극 해소**
 - 한미 FTA 공동위, 한미 비자 공동작업반(WG) 등 협력채널 활용
-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을 통해 수출통제 대상 품목 도입 원활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26 추진)로 서비스 신시장 개척**

일-EU-아세안 전략적 연대·공조로 **新통상환경에 능동적 대응**

- **新통상이슈(공급망·디지털·기후)와 첨단산업 중심 파트너십 강화**
 - * (일본) 핵심광물·첨단산업 공급망, 산업의 AI 적용, 지속가능연료 등 협력사업 발굴 (EU) 네덜란드(반도체), 체코(車), 헝가리·폴란드(배터리) 등 맞춤형 협력 논의 (아세안) 디지털 중심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한-말련 공급망 MoU 협의 등
- **美·中 리스크 대응**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CPTPP 가입 적극 검토**
 - * 농수산업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 추진, CPTPP 회원국 대상 우호여건 조성

신흥동반국 전략경제협력으로 시장 다변화 촉진

- ‘UAE·이집트 **순방 후속 범정부 TF***’(12월) 가동, 성과 창출 및 중동·북아프리카로 성과 확산
 - * 민관 합동으로 핵심사업별 추진방안 마련·협의 → 상대국 정상 방한시 합의(‘26)
- 서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국 통상네트워크 확대, 상대국 협력 수요에 맞는 유연하고 신속한 **모듈형 新통상협정*** 추진
 - * 공급망, 그린경제, 디지털, 핵심광물 등 4대 분야, 국별 맞춤형 협정 요소 구성
- 한-중앙아 정상회의(‘26.下) 계기 핵심광물·플랜트 협력 강화
- 정상 방문 지역 대상 ‘**정상 경제성과 점검 TF(산업부)**’ 신설

□ 수출품목 다변화로 ‘제2, 제3의 반도체’ 육성

- 원전수출 모델·시장·품목 다변화
 - **한-UAE 협력모델** 기반 원전 **新시장**^{베트남·튀르키예} 공동진출 및 국내 공급망 역량 활용 **대형원전·SMR^{미국} 글로벌 생태계 참여***
 - * ▲한미 전략적 투자 활용, ▲중소 원전기업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국내 기업 원전 수출정보 활용 지원을 위한 AI 출시(‘26.上) 등
- K-푸드 등 한류 연계, 700억불 유망소비재* 수출(~’30) 기반 조성**
 - * 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의류, ** 한류 연계 마케팅, 물류, 인증 등
- 방산·플랜트·전력기자재 등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 유망시장 프로젝트 발굴, 우리 기업 주선, 금융까지 원스톱 지원
- 해외인증·기술규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26, 국가기술표준원)

□ 해외 무역장벽에 공세적 대응

-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 상대국 시정조치 요구(「대외무역법」 개정, ‘26)
 - ↳ National Trade Estimate: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 **대화채널(장·차관급) 총력 가동***으로 수출·투자애로 신속 해소
 - * 양자 34개(EU+25개국), 복수국 5개 등 총 39개 가동중, 한-인도 산업위 신설(‘26)
- EU·캐나다 **철강 수입규제 등 규범위반 소지 보호조치에 전략적 대응**
 - 고위·실무급 대화 지속, 협상력 제고를 위한 레버리지 확보

□ 누구나 손쉽게 수출하는 디지털 통상 인프라 고도화

- **해외 역직구 활성화**로 K-소비재 기업의 글로벌 판로 접근성 제고
* ①역직구 대행, ②글로벌 온라인몰 구축, ③마케팅 지원
- 아세안, EU 등 주요 권역을 연결하는 **디지털 통상협정** 구축
- 판로개척 원스톱 지원을 위한 **무역 AI 플랫폼 구축**(^{가칭}AI수출 비서)

□ 무역지원기관 협업과 혁신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수출기업 협력사 대상 **공급망보증 확대**(’25. 자동차·철강→’26. 조선 등)
- **지역 전시회 육성**, 수출바우처, 전시사절단 등 해외진출 지원강화
- 中企 114조원 포함, **역대 최대 무역보험 275조** 공급

③ 경제산업안보: K-산업방파제

공급망 안보

□ 튼튼한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 및 슈퍼 ‘乙’ 육성

-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생산 촉진**
 - 경제안보품목 **국내·외 생산차액 보전**(’25. 146 → ’26. 291억원)
 - 반도체 등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설비·입지 투자지원금 증액** (’25. 1,200 → ’26. 1,700억원) 및 **로봇, 첨단엔진** 등으로 대상 확대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現 10개에서 **10개** 추가 지정(~’30)
* 지원 내용: 금융, 기술개발, 입지, 판로 개척, 규제 완화 등 패키지형
- ‘세계 최초, 최고 소부장’ **슈퍼 ‘乙’ 기업** 지속 육성
 - **유망 소부장 기업에 대형·장기 R&D***, 금융 및 특허 등 집중 지원
* 과제당 7년 이상, 200억원 이상
- **수요기업이 직접 소부장 기업을 선택하는 R&D 협력모델***로 전환
* 수요기업이 R&D 성과의 양산라인 도입을 전제로 R&D 과제, 협력 컨소시엄 제안

□ 희토류 등 핵심자원의 공급망 안정

- 수급 위기 발생시 **컨틴전시 플랜*** 가동으로 **시장충격 최소화**
* 비축물량 대여·방출, 긴급 수입대체, 수급조정조치 가동 등
-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에 **민관 협력 및 공적 지원 확대**
* 민간 발굴 프로젝트 집중 지원, 정책지원 패키지 제공, 맞춤형 국제협력
-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비축 확대, 재자원화 산업 육성**
* '26년 재자원화 지원사업 신설(38억원), 순환자원 지정 확대, 할당관세 적용 등
- **희토류 정제련 및 재자원화까지 기술 자립화 추진**
* 희토류 R&D 종합전략 수립, 희토류 R&D펀드 조성

기술보호·수출통제

□ 경제안보상 핵심기술 보호 강화 및 관리체계 정비

- 기술변화 트렌드 등을 고려, **국가핵심기술 재조정**
- 조사·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기술 유출 감시, 외투 안보심의 강화
- 보안컨설팅, 기술보호 교육 등 **취약기업 대상 보안역량 강화**

□ 전략적 수출통제 대응

- 미국(AI칩), 중국(희토류) 등 주요국과 **수출통제 협력**
- AI칩·서버 등 **불법수출 차단**을 위한 **부처간 협업*** 및 **직권조사 확대**
* 수출통제 이행 워킹그룹: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국정원, 관세청 등

불공정 무역 대응

□ 석화·철강 등 덤핑 피해 주요 업종에 대해 적기 무역구제 조치

- **우회덤핑 규제대상*** 확대, 수입동향 감시 및 관세청과 **협력 제고**
* (현재) 공급국 內 변경 → (변경) 공급국 제한 삭제, 제3국 조립·가공 추가

□ 조사기법 고도화, 조사인력 전문성 제고 등 무역구제 기반 강화

4. 산업통상부 조직문화 혁신 및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탈바꿈

□ ‘가짜 일’을 버리고 성과에 집중할 수 있게 ‘조직문화 혁신’

- 업무 몰입을 방해하는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 추진
 - * ‘조직혁신TF’ 발족(‘25.10) → ‘가짜 일’ 신고센터 등 도입·운영(‘25.12)
 - **보여주기식 행사** 등 근절,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
 - * 행사에 민간 고위급 참석강요 금지, 내실 있는 현장방문·간담회 등은 적극 추진
- 직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 **적극행정 전담팀** 운영,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인센티브** 확대
 -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위임전결 규정 전면 개정**(‘26.1분기)

□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탈바꿈

- (석유공사) 국내외 유·가스전 개발사업 과정상 문제점을 교훈 삼아 **절차적 투명성 강화, 국민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조직혁신 추진***
 - * 자원개발사업 추진절차 전면 개선, 정보공개, 소통 등 투명성 강화
- (한전·한수원) 이원화된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 * 대안: ① 독립된 제3의 기관신설, ②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일원화, ③ 기능별 분담 등
 - 최적 대안 도출 위해 연구용역중(‘25.8~), ‘26.1분기 결정
- (광해광업)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 출자 확대 및 신규 해외사업 참여가 가능토록 「광업공단법」 개정**(‘26)
 - * 핵심광물 개발프로젝트 발굴·관리 지원, 비축·재자원화를 통해 민간 리스크 분담

□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산업통상부 ‘조직기능 혁신’

- **산업자원 안보체계 확립 및 제조 AX(M.AX), 한·미 산업협력** 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조직기능 대폭 강화**
 - * 경제안보 산업자원안보실, M.AX 산업AI전담국, 대미통상한미통상협력과 등 신설